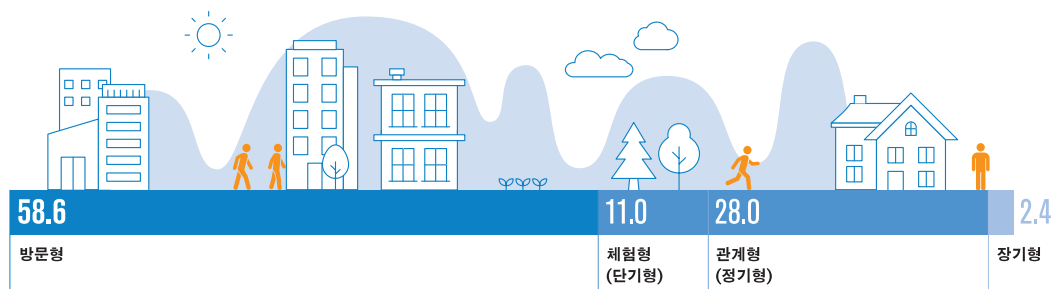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관광’을 넘어 ‘살아보기’로

건축공간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체류형 생활인구의 세부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1일 이상 체류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통계자료실에서는 ‘단순 방문자’를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는 생활인구’로 전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주요 시사점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Q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의 체류 행태와 특성은 어떠한가?



구분	방문 목적 및 특징	체류기간	방문 빈도
방문형	관광, 축제,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단기 방문 반복성 낮음	주로 1~2일	연 3회 이하 또는 1회성
체험형(단기형)	살아보기, 로컬 체험 등으로 일정 기간 머무는 형태	4~15일	연 1~2회
관계형(정기형)	통근·통학, 정기 교류, 가족 관련 반복 방문 업무·교육 등 정기적 체류 목적	2~15일 (반복 체류)	월 1회 이상(연 12회 이상) 또는 주 1회 이상
장기형	16일 이상 체류 또는 상주 취업·귀촌·장기 프로젝트 참여자 등	16일 이상	비반복 또는 장기 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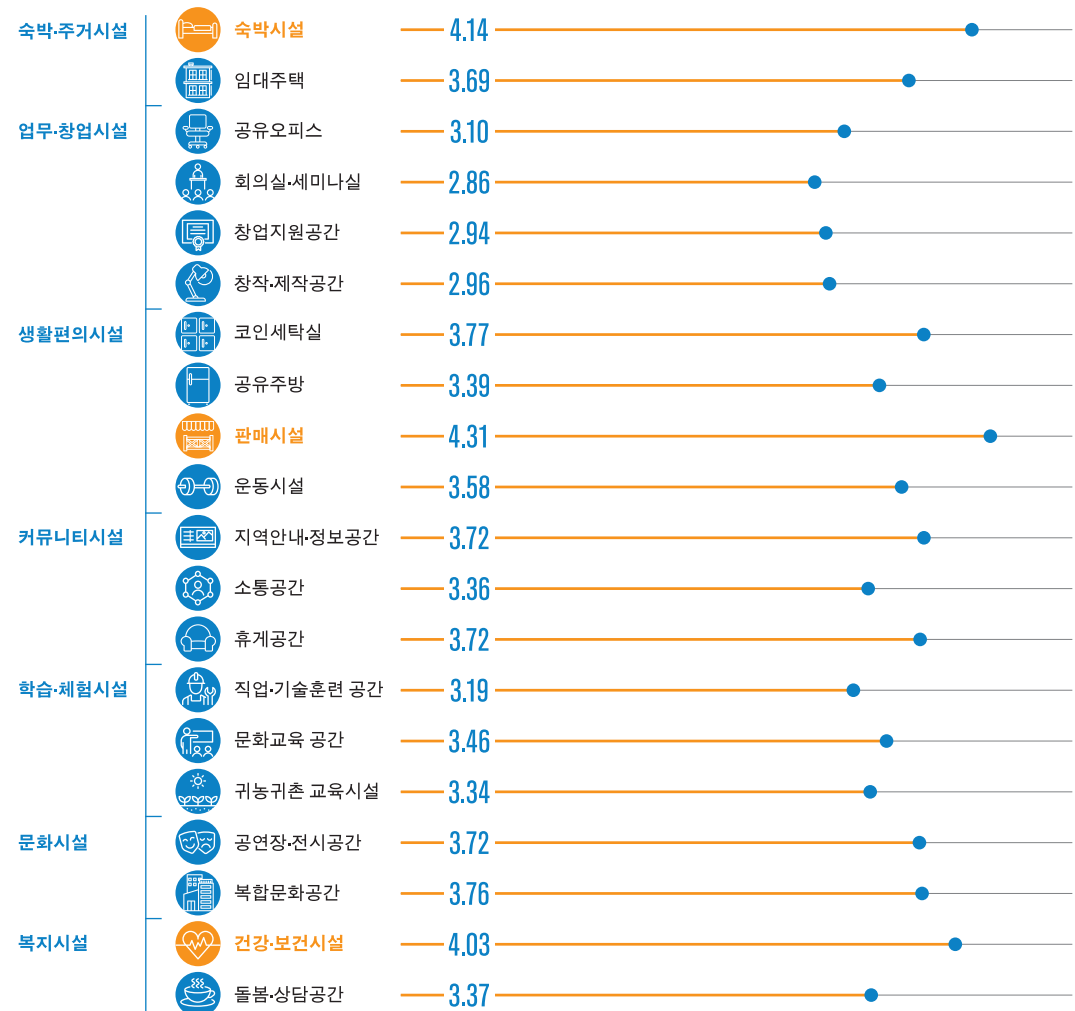
A 체류 목적과 빈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방문형 생활인구’가 다수이나 ‘관계형 생활인구’로의 전환 가능성 주목

이번 조사에서는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체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체류 기간, 목적, 빈도에 따라 ‘방문형’,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 ‘장기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방문형’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1~2일간 관광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어 ‘관계형(28.0%)’은 통근·통학이나 정기적 교류를 위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유형으로, 단순 방문을 넘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체험형(11.0%)’은 워케이션이나 살아보기 등 목적지향적인 체류를 한다. 한편 ‘장기형(2.4%)’은 비중은 작으나 귀농·귀촌과 장기근로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집단으로 정주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 외국인)와 체류인구로 구분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활인구 데이터에서는 체류인구의 체류일수와 체류시간·재방문을 등을 산정하고,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나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분석하고 있다.

Q 생활인구 체류 확대를 위해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할 공간은?

(단위: 점)



A 생활인구의 발길을 잡는 건 ‘화려한 불거리’보다 ‘기본적인 생활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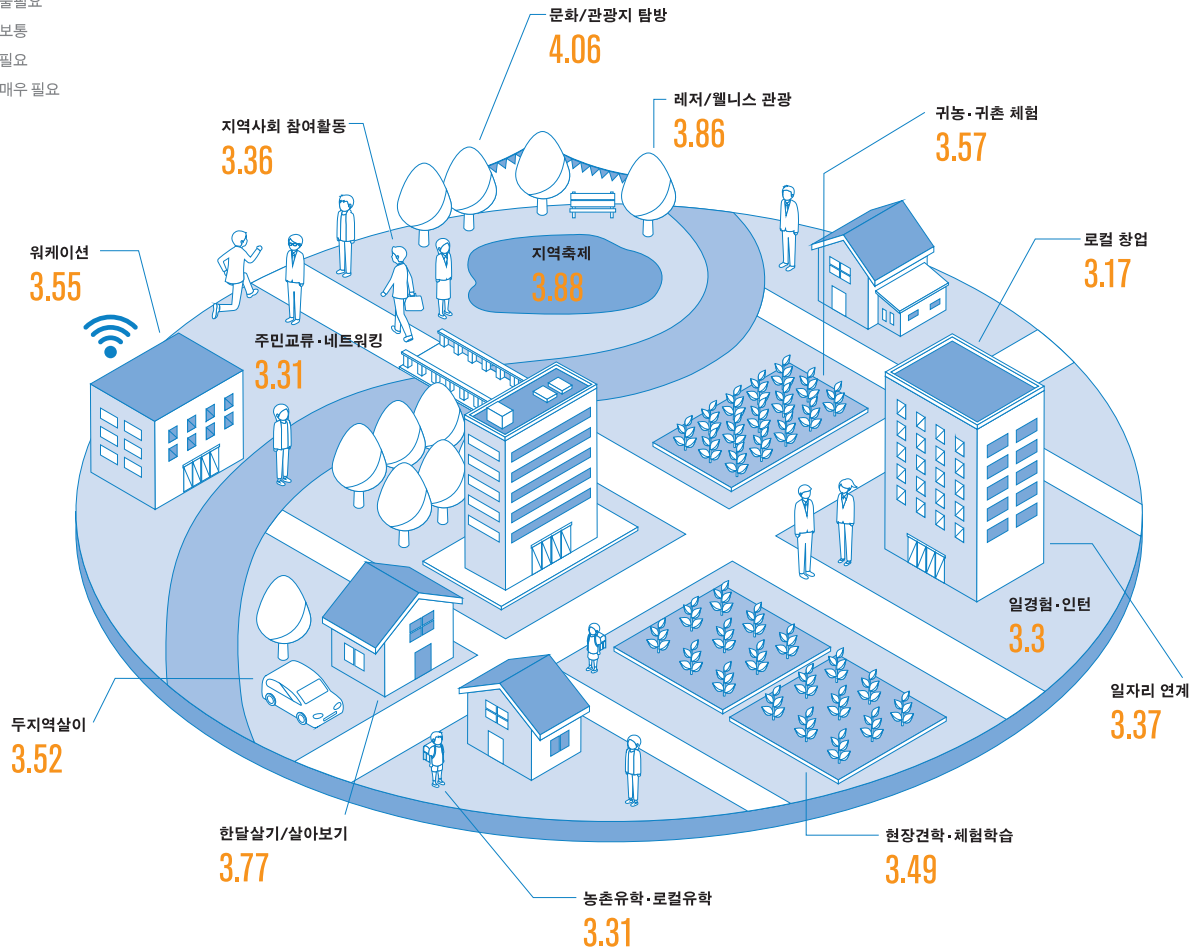
생활인구가 타 지역에 머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는 편의점·상점 등 ‘판매시설(4.31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숙박시설(4.14점)’과 ‘건강·보건시설(4.03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방문자들이 지역에 체류할 때 가장 큰 불편을 느낀 점이 식료품 구매, 숙박 환경, 의료 접근성임을 보여준다. 즉 ‘우리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생활인구 확대를 고려한다면, 대규모 관광시설보다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Q 단순 방문을 넘어 체류 의향을 높이는 프로그램은?

(단위: 점)

* 5점 척도

- 1점: 전혀 불필요
- 2점: 불필요
- 3점: 보통
- 4점: 필요
- 5점: 매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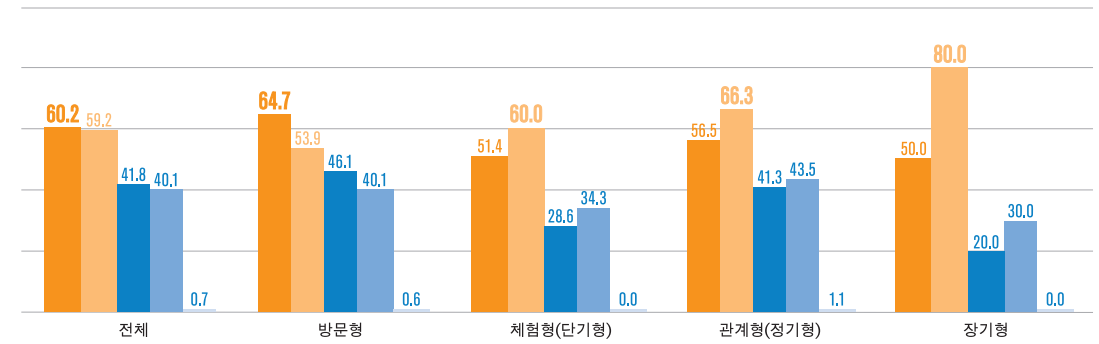
A 지역 고유의 콘텐츠 경험과 함께 '한달살기-워케이션' 등 체류형 프로그램 수요 증가

지역 체류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은 '문화관광지 탐방(4.06점)'이었으나, 지역에 머물며 일상을 영위하는 '한달살기-살아보기(3.77점)'와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3.55점)' 등 체류형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관광을 위해 단기간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직접 살아보는 경험 이 생활인구 전환의 핵심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Q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효과적인 주거지원 정책은?

(중복응답)

- 임대주택 등 정착 주거시설 제공
-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
- 임시 체험주택 제공
- 주택 리모델링·수리비 지원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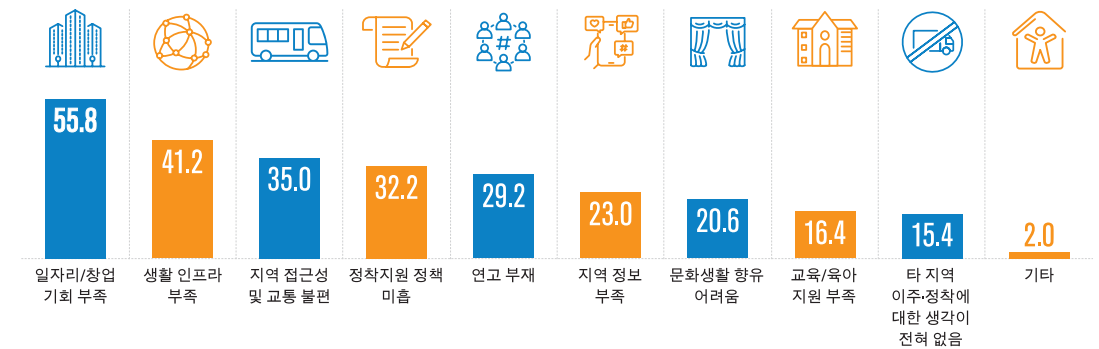
A 방문형은 '주거시설 제공'을, 체험형-장기형은 '주거비 지원'을 더 선호하는 등 유형별 맞춤형 수요 존재

현 거주지 외에 타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방문형'은 거주 기반 자체가 없어 '임대주택 등 정착 주거시설(64.7%)' 공급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반면 '체험형' '관계형' '장기형'은 '주거비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체류 기간이 길수록 그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3위 수요에서 '체험형'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임시 체험주택(46.1%)'이, '관계형'은 기존 주택 활용을 위한 '주택 리모델링·수리비 지원(43.5%)'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단순히 집을 지어주거나 체류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 단계와 체류 특성에 맞게 세분화된 주거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Q 현 거주지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정착을 망설이는 가장 큰 장벽은?

(중복응답)



A '일자리 기회'와 '생활 인프라' 부족

향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나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55.8%)가 '일자리 및 창업 기회 부족'을 1순위로 꼽았다. '생활 인프라 부족(41.2%)' 또한 주요한 장벽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 체류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원격근무 환경 조성, 생활서비스 공급 기반 강화 등 지역의 경제·생활 기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